

“학제개편 논란 제 불찰”... 박순애 자진사퇴

〈교육부 장관〉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 거취 표명 초등입학 연령 1년 단축 발표로 거센 반발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했다. 지난달 4일 임명이 재가된 이후 35일 만이고 취임 34일 만이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8일)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 등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만 밝혔다. 그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지난 5월28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4일 지명 39일만에 임명이 재가됐다. 지명 이후 2001년 이른바 ‘민취 음주 운전 전격, 논문 중복게재 의혹, 자녀

의 학교생활기록부 첨사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부총리직에 취임했다.

임명 이후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내놓았으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로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단축을 발표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철회를 시사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 4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는 학제개편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아 ‘불통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9일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던 박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35일만에 결국 자진 사퇴 뜻을 밝혔다.

뉴스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순애, 논문 중복게재 몰랐단 해명은 거짓말”

민주 강득구 의원, 박순애 지도교수와 통화 내용 공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공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박사과정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관련, 당시 지도교수였던 조나단 레빈 교수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박 장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17일 박 부총리가 1999년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레빈 교수의 내용의 교통기관 선택 및 예산·지지구조 논문을 지역교통정책에서의 대중 지지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재편집해, IRPA에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한국행정학회로부터 2년간 투고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박 장관의 (논문) 공저자가 1999년에 미국 학술지에 교통 관련 논문을 게재했고, 박 장관은 당시 국내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같은 해 IRPA에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를 두고 “제가 직접 레빈 교수에게 해당 논문을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제출했을 때 박 장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레빈 교수는 “박 장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장관이 한국 학술지에 논문을 중복 게재하면서 그를 공동저자로 기재한 사실을 아는지” 묻자, 레빈 교수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아울러 “1999년 박순애 장관이 한국으로 귀국해 이미 동일한 내용의 논문이 미국에서 게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사실인지 묻자, 레빈 교수는 “타당한 해명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대답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레빈 교수는 특히 논문 저자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논문을 실수로 두 개의 다른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물음에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학자로서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제출한 행위가 교육부 훈령에 없었던 이유만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 묻자 미국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고 했다.

뉴스시스

국내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게도 혜택

민주 신영대 의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원 대상 확대로 국가균형발전 기여 기대”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을 이전할 시 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대상에 새로 설립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 인구감소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업 집중현상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 사업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일자리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설치비용과 고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게 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법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하거나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선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게도 혜택이 확장되어야 한다”며 “지원 대상 확대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단일화 아직 유효... 반전 여지 많다”

‘민주 당권 도전’ 박용진 의원, 추격전 총력
‘어대명’ 첫 경선 결과에 “추격할 일만 남아”
‘최고위원 도전’ 윤영찬·송갑석 의원 등과
“과거 지도자들의 정신 회복되게 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8일 전당대회 첫 경선 투표 결과를 두고 “이제 추격할 발판을 마련할 일만 남았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었다.

박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수치상의 격차는 커 보이지만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강훈식 후보와 단일화 견제차가 크다는 질의에 “아니, 국민들께 알려드린 내용 그대로 최종적 단일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한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방 대세론 때문에 투표를 이 낮다. 체면 속에서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며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단일화가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후보의 ‘노릇 익수’ 논란을 두고는 “익수를 거부하는 정치인이 당의 대표가 되거나 국민의 대표가 되기는 어렵다”며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해야 하겠다. 제가 비판을 좀 날 서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강한 후보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는 “약점 잡히지 않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깨끗한 당 대표가 강한 당 대표이고 강한 민주당을 이끌 수 있다”며 “복소리나 주장만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의 ‘셀프공전’ 논란 비판과 관련해서는 “셀프 공전과 관련해 어떤 해명, 사과나 책임이 없지 않았나”라며 “우리 당의 훌륭한 리더들은 한 번도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분명히 책임을 말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제기된 당헌 80조와 관련해 개정 논의를 두고는 “또 다른 사당과 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났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용진은 계파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부러웠던 그 가치를 제대로 이 시절에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공동에서 사당화 방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결을 위한 포용과 연대 회의’ 및 김대중 정신 회복 특별본부 발족식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윤영찬 송갑석 후보 등과 함께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 지도자들의 정신과 당의 공적 판단이 회복되게 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또한, 여의도 국회 소공동에서 사당화 방지 관련 기자회견도 가졌다. 박 의원은 이후에도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나 “국민들은 김 전 대통령 같은 훌륭한 인물이 다시 태어날 바라고 있다. 그러자 정치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항상 공헌할 수 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전북 농촌지역 특구 개발 시급”

박용근 도의원, “장수 흥로특구 지정 노력해달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전북의 농촌 지역 특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용근 의원은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관련 내용을 질의하면서 전담하는 특구 34개를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전북도는 14개(41.17%)특구에 그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의 27개 특구 발굴과 비교해도 전북은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51.18%)으로 현재까지 낮은 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용근 의원은 장수 흥로 특구 등 전북의 농촌지역에 특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별 특화된 산업 집적 및 신규산업 창출 등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특구 제도는 중앙정부가 개별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는 방식은 지방의 실정과 특성 차별적인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한편 특구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04년 도입 이후, 22개 특구가 신규지정되었고 24개 특구가 해제·통합돼, 현재 19개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김경수 기자



“기관장 찍어내기, 직권 남용”

민주, 한덕수 등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기관장 찍어내기’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연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등이 홍준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통합권 및 감독권(국무총리), 감사권(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는 국무총리에게 주어 진 연구기관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한 및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에 기초한 일



반직 직무권한에 속한에도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을 통해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목으로 KDI에 일반 현황 회계, 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져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KDI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검찰이 예상한 당시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비상조치대책위원회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여러 법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검토를 시작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있던 여러 인사 문제를 가지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실무자를 소환조사하고 있어서 더 이상이 문제를 구두경고 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맞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시스

군산시의회, 2차 추경예산

심의 앞두고 간담회 열어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8일 의정실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제249회 임시회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 지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에 대한 사전보고 등 시 집행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행부의 주요안건으로는 코로나19 서민 생활 안정지원으로 △정부·도 추경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코로나19 대응 방역·치료지원 등 △주민주원 사업 해소 등 주요현안 사업과 민생기 공약사업 추진 등 중요 이무이었다.

의장단은 “코로나 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 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